
2015년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참가결과 보고

The 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 2015
(2015. 10.26. ~ 30., OECD)

2015. 12.



경 제 통 계 국
소 득 통 계 과

차 례

I. 출장개요	1
II.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	1
1. 회의개요	1
2. 회의주제 및 일정	2
III. 주요 의제별 회의내용	3
가.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	3
1. 그림자금융	3
2. 금융계정	4
3. 금융부문의 SNA 이행효과	4
4. 기 타(Items for Information)	5
나.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	5
1. 통계단위의 이론과 실제	5
2. 금융서비스의 측정	7
3. 기 타(Items for Information)	9
4. 가계의 소득, 소비 및 자산	11
다.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	15
1. 세계화	15
2. 속보성 지표	17
3. 국민계정 추계 현황	19
4. 기 타(Items for Information)	21

I. 출장개요

(출 장 자) 심상욱

(출장기간) 2015. 10.25.(일) ~ 11.2.(일)

(출장목적)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 참가

*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orking Party on National Accounts, WPNA): SNA 관련 현안, 최근 연구성과 및 각국의 실무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

(출장지역) 프랑스 파리

II.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

1. 회의개요

(목적) SNA 관련 최근 동향 및 2008 SNA 이행 관련 각국의 실무사례 공유 및 환류

* '2008년 세계 금융위기'의 경험을 계기로 금융 및 실물부문의 통합적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0년부터 금융통계 작업반(Working Party on Financial Statistics, WPFS)과 공동 개최

(주관) OECD 통계국 국민계정과

* 의장: Peter van den Ven (OECD 통계국 국민계정과장)

(기간 및 장소) 2015. 10.26.(월) ~ 30.(금), OECD 본부

* (회의진행) 10.26. - 10.27.: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
10.27. - 10.29.: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(WPFS+WPNA)
10.29. - 10.30.: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(WPNA)

(참가자) 45개국의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전문가와 UN, OECD, IMF, Eurostat, UNECE, World Bank 및 BIS(국제결제은행) 등 국제기구 관계자 총 156명 (합동회의 기준)

* 한국: 통계청과 한국은행 [김영태 국민계정부장(단장), 김성준, 김용현 자금순환팀 과장, 김성자 지출국민소득팀 과장 및 김태정 주OECD대표부 주재관] 관계자 5명

(기대효과) SNA 관련 최근의 연구성과 및 각국의 경험을 흡수하여 지역 계정의 개선·개발작업 환류 및 2008 SNA 추가 이행작업의 기본방향 설정

2. 회의주제 및 일정

□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: 10. 26. (09:00) - 10. 27. (15:30)

주 제	주 요 내 용	발표/사회
1. 그림자금융 (shadow banking) 관련 논제	■ 그림자금융에 대한 OECD 설문 결과	OECD
	■ 금융안정위원회(FSB)의 그림자금융 모니터링	BIS/FSB
	■ 칠레의 사례	칠레
	■ 미국의 그림자금융	미국
	■ 그림자금융의 국민계정 반영	네덜란드
	■ Euro권의 그림자금융	독일
2.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금융계정 자료	■ 각국의 금융계정 및 대조대조표에 대한 검토 결과	IMF
	■ 한국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 분석	한국
	■ 금융계정 통계의 평가 및 활용	인도네시아
	■ 비금융법인에 대한 금융계정 자료 활용	터키
	■ 한국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	한국
	■ 거시경제 불균형 시의 금융자료 활용	Eurostat
	■ 투자 및 장기자금 조달의 최근 추세	캐나다
	■ 금융계정에서의 거래주체 파악	OECD
3. 패널토론	■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 금융통계	OECD
4. 2008SNA/ESA2010 이행 효과	■ 분기 금융계정의 ESA 2010 이행 효과	ECB
	■ 금융계정의 2008 SNA 이행 효과에 대한 OECD 설문 결과	OECD
5. 기 타	■ 러시아의 금융계정	ECB
	■ 기관투자자 및 가계의 금융자산·부채 관련 분기조사 결과 보고	OECD

□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: 10.27. (16:00) - 10.29. (11:00)

주 제	주 요 내 용	발표/사회
1. 통계단위의 이론과 실제	■ 통계단위: 호주의 사례	호주
	■ 통계단위의 실제 적용	Eurostat
	■ 국민계정체계에서의 통계단위	OECD
2. 금융서비스의 측정	■ 호주 국민계정의 금융보험업 측정방법	호주
	■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중개서비스	미국
	■ 대손처리 및 금융중개서비스	IMF
	■ 남아공의 금융부문 산출 측정	남아공
3. 기 타	■ 한국의 공공부문 통계	한국
	■ 가계부문 고찰	OECD
	■ 일반정부 부채 관련 Database 소개	BIS
4. 패널토론	■ SNA 연구과제	OECD
5. 가계의 소득, 소비 및 자산	■ EG DNA 활동상황	OECD
	■ 가계 분위별 소득분배, 소비 및 저축	멕시코
	■ 이스라엘의 소비 배분자료	이스라엘
	■ 칠레 가계부문의 자산 분배	칠레
	■ 거시자료의 가계 분배	캐나다

□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: 10.29. (11:30) - 10.30. (16:00)

주 제	주 요 내 용	발표/사회
1. 세계화	■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	칠레
	■ 세계화 관련 사업경과 보고	Eurostat
	■ 국제계정 개발 추진	UNSD
	■ 국제통합 경제계정을 위한 확장 공급사용표	OECD
2. 속보성 지표	■ 속보성 지표 개선사업	UNSD
	■ 불황기의 OECD 선행종합지수의 효용성 검토	OECD
	■ 유럽지역의 속보 GDP 편제	Eurostat
3. 국민계정	■ 칠레의 조직 및 추계 현황	칠레
	■ 뉴질랜드의 국민계정 개선 추진	뉴질랜드
	■ 유럽 통계교육 프로그램	Eurostat
4. 기 타	■ 인적자본 T/F 활동 보고	노르웨이
	■ 토지 및 기타비금융자산 T/F 활동 보고	OECD
	■ 환경계정 T/F 활동 보고	OECD

Ⅲ. 주요 의제별 회의내용

가. 금융통계 작업반 회의(WPFS)

1. 그림자금융(shadow banking)

- **(논의배경)** 그림자금융은 비은행권에서 거래되는 금융·신용중개서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은행권에 비해 법적·제도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바,
 - 완화된 규제에 기인한 높은 위험은 금융시장 불안 및 금융위기 등의 경제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, 국민계정 체계를 통한 그림자금융의 실상 파악에 대한 금융전문가 및 통계작성자들의 관심 증가
- **(발표내용)** OECD 및 금융안정위원회(FSB) 등 국제기구의 관련 사업 추진 결과 보고와 함께 칠레, 미국 등 4개국에서 자국 사례 발표
 - **(OECD)**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통계작성 기반 마련을 위해 4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금융의 정의, 포괄범위, 분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
 - **(FSB)** 전세계 그림자금융 동향 및 구조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그림자금융 모니터링의 2014년 실시결과 보고
 - **(각국 사례)** 칠레, 미국, 네덜란드 및 독일 등 4개국에서 자국의 그림자금융 실태 및 통계 반영방법 등에 대해 소개

2. 금융계정

- **(논의배경)**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잠재적 위험요인의 파악을 위한 금융지표의 작성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,
 - 금융계정 및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거래의 제도부문별 구분 작성(whom to whom basis) 등 보다 세분된 통계작성을 통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파악 방안에 대해 논의
- **(발표내용)** IMF, Eurostat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사업 추진 및 연구 결과 보고와 함께 한국,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자국 사례 및 연구결과 발표
 - **(IMF)** 각국에서 수집한 대차대조표의 비교·분석을 통한 금융안정성 분석 결과 발표
 - **(Eurostat)**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채, 금융부문의 레버리지 등 금융지표를 활용한 거시경제 안정성 분석 방법 논의
 - **(OECD)** 금융통계의 제도부문별 구분 작성의 장점 및 통계작성 시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
 - **(각국 사례)** 한국, 인도네시아, 터키 및 캐나다에서 금융지표를 이용한 자국의 금융실태 분석 결과 소개

3. 금융부문의 2008 SNA(ESA 2010) 이행 효과

- **(논의배경)** UN 및 EU 등 국제기구의 2008 SNA 및 ESA(유럽계정체계) 2010의 채택과 각국에 대한 이행 권고에 따라 주요국들이 2008 SNA 및 ESA 2010 이행 완료
 - 상기 배경 하에 주요 국제기구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작업반에 보고
- **(발표내용)** OECD 및 Eurostat가 회원국들의 2008 SNA 및 ESA 2010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 보고
 - **(OECD)** 4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부문의 2008 SNA 이행 관련 설문조사(작성 시제열, 제도단위 분류방법 적용 여부, 금융대차대조표의 이행효과 등) 결과 보고

- (Eurostat) EU 회원국의 ESA 2010 이행에 따른 분기 금융계정의 변동내용 분석 보고

4. 기 타

- (발표내용) 러시아의 금융계정 작성현황 소개와 함께 OECD에서 실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계의 금융자산·부채에 대한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

나. 금융통계 및 국민계정 작업반 합동회의

1. 통계단위의 이론과 실제

- (통계단위: 호주 사례) 호주는 1990년대에 과세체계의 개편에 착수하여 2000년대 초 기업명부(Australia Business Register, ABR)를 도입하였으며, 통계청은 ABR을 기초로 통계단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바 있음
- 2013년, 통계청은 통계단위를, 기업체(enterprise group, EG), 법적실체 (legal entity, LE), 활동단위(type of activity unit, TAU), 위치단위 (location unit) 등으로 세분하고, 경제통계 개선작업에 착수
 - (EG) 2008 SNA에서 기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단위들로 나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LE에도 적용 가능
 - (LE)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거나,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단위
 - (TAU) EG 산하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로 복수의 TAU가 하나의 LE로 구성되거나, 복수의 LE가 하나의 TAU로 합쳐질 수 있으며, 자본 지출, 매출액, 임금 등 생산 및 고용 관련 자료를 신고
 - (location) SNA의 사업체 또는 지역활동단위(local kind of activity unit, KAU)에 부합하는 단위로, 분리될 수 없는 물리적 실체로서 일정지역에 상주하면서 생산에 종사
- 통계단위의 정립과 함께 사업체조사의 기반이 되어왔던 통계청 기업명부 (ABS Business Register, ABSBR)를 경제통계와 관련한 모든 자료의 연계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

- 이에 따라 주로 조사모집단으로 이용되던 ABSBR은 기업거래자료, 통계조사자료, 기업실태정보 등 기업체 관련 자료의 연계 중심으로서 보다 폭넓은 활용가능성을 가지게 됨
- 향후 통계청은 ABSBR를 기업자료의 중추로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,
 - 이를 세부지역 단위의 통계 작성을 위한 인프라 및 각 통계단위 수준의 자료분석 도구로 활용 예정인바, 변화가 많은 기업활동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**(통계단위의 적용: Eurostat)** SNA의 기본단위는 제도단위로서 거래에 참여하고 자산 및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제단위로 정의되며, ESA의 기본단위에 대한 개념과 일치
 - EU 이사회 규정(Council Regulation)은 ESA에 준하여 통계단위의 기준 및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, 기업통계에 적용하는 통계단위가 회원국마다 달라 회원국 간 기업통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유럽통계체계위원회(European Statistical System Committee, ESS)는 글로벌 경제 측정방법 개선에 관한 Riga 각서를 채택하고,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한 통계단위의 활용을 강조
 - 상기 배경 하에 각국 기업통계부서장(Business Statistics Directors Group, BSDG) 및 거시경제통계부서장(Directors of Macro-Economic Statistics, DMES)들은 통계단위 관련 규정의 이행 추진에 합의하는 공지문 발표
 - 이후 BSDG 및 DMES는 통계단위와 관련하여 Eurostat T/F에서 마련한 기본지침 및 세부규칙을 채택하고 유로권기업명부(Euro Group Register) 및 국가별 기업명부의 국가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
 - 기업통계의 국가 간 비교의 어려움은 이사회 규정에 대한 회원국의 상이한 해석에 주로 기인하는바,
 - 유럽의 기업통계 및 국민계정 작성자들의 상호 협업 및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T/F가 작성 중인 적용지침 등을 통해 기업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
- (국민계정에서의 통계단위: OECD) 2008 SNA는 두 가지 유형의 통계 단위를 적용하고 있는바, 공급사용표는 사업체, 제도부문별 계정은 제도 단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
 - 이러한 각기 다른 통계단위 적용으로 통계단위 및 경제활동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통계단위에 대한 T/F 설립을 통해 좀 더 근원적인 고찰 시도
 - SNA가 통계단위로 '사업체'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초자료가 사업체 단위로 수집될 경우 자료원과의 연계 및 생산단위의 생산과정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이지만,
 - 생산과정의 국제 분업화, 아웃소싱의 증가 및 지식재산생산물의 역할 증대에 따른 생산단위의 동질성 약화와 함께 경제적 소유권 등의 개념 부상으로 통계단위로서의 '기업'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
 - T/F의 임무는 2008 SNA에서 권고하는 통계단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, 단위 설정기준 및 산업분류의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변화가 도입될 경우, 실제 자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임
 - T/F는 2017년 중에 사업추진에 대한 1차 보고를 할 예정이며 2020년에 최종보고 예정

2. 금융서비스의 측정

- (호주 사례) 호주는 연간 및 분기 주기로 생산·분배·지출 GDP를 작성 하고 있으며, 금융 관련 활동은 금융보험업의 산출(생산), 금융법인의 소득(분배), 금융보험서비스의 최종소비, 수출 및 수입(지출)으로 나타남
 - 금융보험업은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연금기금, 금융보조기관 및 중개인 등을 포괄하며, 2013~14년 총부가가치의 9%를 차지
 - 현재 금융자산 취득·처분 시의 금융서비스가 동 업동의 추계범위에서 제외되어있고 감독기관 및 통계청에서 수집되는 기초자료 형태가 10년이 넘는 것이어서 산업분류 등의 재검토 필요
 - 또한 간접금융중개서비스(FISIM) 추계와 관련, 위험 및 유동성전환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바, 관련 연구 수행 후 위험프리미엄에 속하는 대출이자 일부 및 유동성전환서비스를 FISIM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

- 현재의 호주 국민계정체계의 FISIM은 위험프리미엄 및 유동성전환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바, 적절한 절차를 통한 반영방법 모색 중
- **(비은행 금융중개서비스: 미국)** 금융부문의 대출이자 서비스수수료 (FISIM), 순이자 및 대손마진*으로 이루어지며, 이때 서비스수수료는 대출 이자에서 기준이자율 적용이자 및 대손마진을 차감한 금액임
 - * 대손마진(default margin):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손실의 보전을 위한 마진으로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상각액을 기초로 추계
- 기존의 금융서비스 추계 시 대손마진은 고려되지 않았으나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손실분을 산출에서 차감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서 대손마진을 차감하여 금융서비스 추계
- 대손마진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의 추계방법과 현재 추계방법을 비교할 때 전자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등락폭이 상당히 큰 반면, 대손마진을 통한 조정을 거칠 경우 서비스의 추세가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
- **(대손처리 및 금융중개서비스: IMF)**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도 높은 대출에 부과되는 높은 이자의 성격(서비스 vs. 이자)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국가별 사례 검토와 함께 연구결과의 국민계정 반영방법 모색 필요
 - 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나, SNA에는 반영되지 않아, 일부 학자에 따르면 FISIM으로 인한 채권자(은행)의 처분가능소득은 대손충당금 만큼 과대계상되며, 채무자의 처분가능소득은 과소계상됨
 - 이때, FISIM을 대손충당금 만큼 차감하면 계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바, 동 충당금을 채무자의 귀속 자본이전수취로 처리하면 불일치 해소가 가능하나,
 - 대손충당금은 은행의 위험 분석, 절세, 기타 법적 요인 등의 고려 하에 책정되기 때문에, 충당금의 자본이전 처리는 여러 문제를 수반하게 됨
 - 현행 지침 하에서 충당금은 이자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나 이 때문에 채권자의 처분가능소득이 과대계상되는지는 불확실하며,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제도도 나라마다 상이하여 통일된 지침의 도출 곤란
 - 현실적으로, 은행은 상환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 추가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취하는바, 자본이전 방식의 적용 없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감소한 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전 가능

- 따라서 상기 방식의 FISIM 조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, 일부 나라에서는 좀 더 미묘한 조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, 금융불안정을 겪을 경우는 한시적인 추계방법의 도입도 고려 필요

□ **(금융부문의 산출: 남아공)** 남아공의 금융서비스는 중앙은행에서 분기 및 연간으로 추계하며 2014년에 2008 SNA를 부분적으로 이행한바 있음

- 금융부문은 은행, 기타금융중개기관, 보험회사·연금기금 및 금융보조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
 - 일반은행이 금융 부가가치의 46.4%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으로 금융보조기관(23.8%), 생명보험회사(14.0%) 순임
 - 금융부문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는바, 2011~14년의 GDP 평균성장률은 2.3%에 그친 반면, 금융업은 5.1% 성장
- FISIM은 1999년부터 추계되었고, 법인의 중간투입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최종소비로 나타나며 FISIM 산출액은 제도부문 및 산업 전반에 배분됨
 - 2014년부터 FISIM 추계에 개선이 이루어져 은행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이자율을 도출하기 시작하였고, 비은행금융기관의 FISIM도 산출하기 시작
- 향후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안에 의한 기업명부 활용, 지주회사의 추가 등을 통한 개선·보완작업 추진 예정

3. 기 타

□ **(공공부문통계: 한국)** 공공부문계정은 중앙·지방정부와 기금,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이 적용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, '지방공기업법'이 적용되는 기관 및 SNA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 구성

-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는 '정부 지배' 및 '재화 및 서비스 판매가격(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)'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여기에 사회보장기구 및 구조조정기구가 일반정부에 포함되었으며,
 - 우체국, 수도사업본부,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정부 지배를 받는 비영리단체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음

- 2014년 일반정부 지출은 명목 GDP의 32.0%, 공공부문 지출은 46.8%에 이르렀음
 - 정부는 GDP의 1.2%, 공공부문은 1.1%의 순대출을 각각 기록하였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할 경우 정부는 1.5%의 순차입을 나타냄
 - 2013년 공공부문의 부채는 GDP의 3.3%를 기록하였는바, 이 중 일반정부 부채는 3.0%, 공공비금융법인 부채는 0.2%로 나타났음
- 동 통계는 정부재정통계 T/F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설정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를 기반으로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거쳐 개발되었고, 향후 공공부문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(가계부문 고찰: OECD) GDP는 경제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중 하나인 반면, 삶의 질의 파악을 위한 지표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, 가계부문의 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
 - Stiglitz, Sen 및 Fitoussi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관한 보고서가 제시한 12개 권고안 중에서도 5개가 SNA 및 가계부문 자료를 다루고 있어 GDP 성장과 가계소득의 괴리 문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바,
 - OECD는 GDP, 가계의 처분가능소득, 소비자기대수준, 소비 및 저축, 부채 및 순자산, 실업 등 10개의 나라별 지표를 모아 홈페이지에 탑재 (Household Dashboard)하고 분기마다 갱신하고 있음
 - 각국의 GDP 및 가계 지표들을 살펴보면, GDP 성장률 및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괴리 원인은 상대가격 변화, 생산자로서의 가계의 중요도, 임금 비중 및 정부 개입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,
 - 피용자보수로 분배되지 않는 정부 및 법인부문의 부가가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, 그 다음으로 가계의 이전수취, 법인의 피용자 보수 지급, 가계의 수취재산소득 등이 있음
 - 삶의 질의 측정 수단으로서 GDP가 노정하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, 가계 처분가능소득 등 가계부문의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국민계정체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바,
 - GDP와 가계처분가능소득 등 가계 관련 지표 간의 괴리에 대한 심층 검토를 통해 여러 시사점 도출 가능

- (일반정부 부채 관련 DB 소개: BIS) 국제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BIS는 각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, 본 업무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통계청을 통해 공공부채 자료를 수집
 -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제도부문별 계정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부채 항목들이 사용되고 있으나, 일부 국가에서 작성하지 않거나,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
 - 또한 공공부채 포괄범위, 가치평가 및 연결처리방식 등에서도 국가 간에 차이가 있고, 작성주기도 다르며, 메타데이터도 충분치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
 - 상기 배경 하에 BIS는 정부부채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수집 자료의 표준화(안)을 제안

구 분	표준화(안)
금융상품 포괄범위	현금통화 및 예금, 채무증권, 대출금
하위부문 포괄범위	일반정부
연결처리유형	하위부문 간의 연결처리 만 포함
가치평가	시장가격
순계처리 여부	총액 기준 작성
작성주기	분기

- 상기 표준화(안)에 의거 BIS는 새로운 자료를 공표하였고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, 향후 시계열 확장을 통해 다양한 분석기반 마련 예정

4. 가계의 소득, 소비 및 자산

- (EG DNA 활동경과: OECD) OECD/Eurostat 전문가그룹(EG DNA)은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국민계정 가계소득자료를 소득계층별로 분배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를 추진 중
 - 2013년의 1차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정제된 방법론 및 각국에서 수집한 2011~12년 자료를 기반으로 수행한 2차 연구 결과, 지표의 설명력 및 일관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
 - 지표의 신뢰성 검증에 충분한 시계열의 미축적 및 미시-거시지표 간 괴리 상존 등 다루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

- 미시지표 및 거시지표 간의 괴리는 작성결과의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, 괴리 발생의 원인 파악 및 가계그룹에 대한 괴리의 배분 방안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사용하고 있는 미시자료의 시의성이 떨어져,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재 시점 추계(nowcasting) 기법의 모색 필요
 - 본 사업의 최종 결과보고는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며, 미시-거시자료 괴리 관련 추가 연구 및 핸드북 작성 등 후속사업이 이어질 예정
- **(가계분위별 소득분배: 멕시코)** 멕시코는 EG DNA 참가국의 하나로 거시지표와 미시지표 간 괴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, EG DNA의 지침에 따라 2008, 2010, 2012년의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시산
- 기초자료로는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(응답률: 2012년 기준 88.2%)를 사용하였으며, 가계소득 및 소비를 추계범위에 포함시킨 반면, 자산은 제외
 - 시산은 분위별, 가계유형별, 소득원별로 이루어졌는바, 주요 소득원은 피용자보수로 가계조정처분가능소득의 34.8%(3년 평균)를 차지하였으며, 그 다음은 혼합소득(24.9%), 재산소득(22.6%) 순임
 - 2012년의 분위별 소득을 살펴보면 1분위에서 5분위까지 피용자보수가 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두 번째로 큰 재산소득의 경우, 5분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
 - 가계유형에 따라 소득의 구성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으나, 피용자보수의 비중이 대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
 - 시산 결과가 과거 시산 시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, 방법론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는바, 향후에는 EG DNA의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좀 더 정제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제 추진 예정
- **(가계분위별 소비지출: 이스라엘)** 총량 중심의 국민계정 지표들이 소득 및 소비의 계층 간 불균형 측정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EG DNA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분위별 가계소비지출 분석
- 거시지표인 국민계정의 가계최종소비지출과 미시자료인 가계지출조사를 연계하여 EG DNA 지침에 따라 2009~13년의 분위별 가계최종소비 도출

- 2013년 가계최종소비지출은 5분위가 전체의 30.7%를 차지하여 1분위 (12.0%)의 2배를 넘고 있음
- 음식료품이나 통신비 지출은 분위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반면, 가구 구입, 주택보수 및 차량 구입 등은 분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
- 가계현물이전수취는 1분위가 27%로 가장 높고 5분위가 15%로 가장 낮게 나타남
- 분위별 지출형태는 지출항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출 총액의 변화만으로는 적절한 시사점 도출이 곤란한 바 지출항목 중심으로 지출형태에 대해 세부 검토 필요
- **(가계부문의 자산분배: 칠레)** 금융위기를 통해 가계소득 및 자산분배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, 칠레 중앙은행은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자산 분배에 대한 시산작업 수행
 - 가계금융조사 자료는 가계부채, 자산 및 소득과 함께 인구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바,
 - 동 조사로부터 추출된 처분가능소득, 자산(주택 및 기타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등), 부채 관련 정보를 통해 분위별 순자산 및 순수취소득, 가구주 연령, 주택 소유현황 등의 파악 가능
 - 시산 결과, 5분위에 72%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, 전체 가구의 83%를 차지하는 1분위의 순자산은 부(-)의 값을 기록
 - 가구주의 연령 증가에 따라 자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, 전체 가구의 15%를 차지하는 35세 이하 가구주 가계의 자산은 전체의 7%에 그쳤고, 전체가구의 7%인 6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자산은 32%를 차지
 -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자산의 74%가 주택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있고,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6%에 그치고 있으며, 이들 중 절반 가량의 순자산은 부(-)의 값을 기록
 - 가계부채는 모든 분위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, 96%의 금융자산을 1분위가 보유하고 있어,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

- 부채비율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바, 소득수준 및 신용대출의 연계가 강한 것으로 보임
- 자산보유는 상위분위로 올라가거나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, 가계부채는 모든 분위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어 양자의 특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비교·검토 필요
- **(거시자료의 가계 분배: 캐나다)** 캐나다 통계청은 가계부문의 소득, 소비, 저축, 자산 및 부채의 계층별 분배 지표 개발을 위하여 국민계정 지표와 미시 가계자료의 통합을 추진하여왔음
 - 통합작업을 위해 금융안정성조사, 가계지출조사 및 소득조사 등의 통계 조사와 사회정책모형DB 등의 DB자료를 기초자료로 사용
 - **(금융안정성조사)**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표본조사로 자산, 부채, 고용상태, 소득 및 학력 등을 조사
 - **(가계지출조사)** 약 1만7천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 및 지출, 가구 및 주거특성 등을 조사
 - **(소득조사)** 약 3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내역, 학력, 장애 여부, 보육비 지출 및 개인소득 등을 조사
 - **(사회정책모형DB)** 인적과세 및 현금이전체계 등 정부와 개인 간의 금융 연계로 인한 소득 재분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만명의 관련정보 축적
 - 상기 자료를 추계기반으로 활용하면서 미시-거시 통합자료의 시계열 확장은 가능해졌으나 아직 미시지표의 자산합계와 국민대차대조표의 자산합계 간에 괴리 존재

< 미시자료 및 거시자료의 자산·부채 차이 >

	금융안정성조사 (A)	국민대차대조표 (B)	차이 (A-B)
총자산	9,410,656	8,631,516	779,140
- 비금융자산	4,744,580	4,042,444	702,136
- 금융자산	4,666,076	4,589,072	77,004
총부채	1,337,071	1,680,799	-343,728
순자산	8,073,585	6,950,717	1,122,868

- 향후 미시 기초자료의 세부사양 및 대표도 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방법론을 정제하여 2016년 말까지 시산작업 수행 후, 추가 보완을 거쳐 2017년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바,
- 본 지표를 통해 경제·사회정책의 수립 및 가계부문의 금융안정성 평가 기반 조성 기대

다.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

1. 세계화

- (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: 칠레) 기존의 지표들이 세계화로 인한 생산 활동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,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이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부상
 -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 측정을 위해서는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국내생산 기여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바, 2008~12년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총수출의 국내 및 국외기여분을 분리 도출
 - 칠레의 수출의 국외기여분은 상대적으로 작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구리광업의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서비스업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
 - 수출에서 국외기여분이 높은 업종도 구리광업으로 나타났는바, 이는 수출에서 차지하는 동 업종의 비중이 높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며,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외의존 품목은 에너지로 나타났음
 -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의 정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생산활동을 구성하는 단위들의 동질성 유지가 중요하며, 이를 위해 OECD 및 APEC은 생산단위의 특성에 따라 공급사용표를 세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,
 - 칠레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한 생산자 유형별로 공급사용표를 세분하는 방안을 모색 중
- (세계화 관련 사업경과 보고: Eurostat) 세계화로 인한 경제활동 변화의 통계 반영을 위해 Eurostat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국의 관심 및 협력 유도 필요

- Eurostat은 회원국의 투입산출표 작성체계를 통합한 유럽 투입산출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유럽국가 공급사용표 및 산업연관표 작성을 추진
 - 또한 국민계정통계와 국제수지통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자 간 차이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바, 적용되고 있는 개념 및 세계화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세부 검토 중
 - 아울러 기업통계의 통합을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회원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, 세계화의 통계 반영을 위해 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추진 전략을 수립·추진 중
 - 현재 세계화의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협업체 구성을 완료하였고, 2016년 1월부터 활동이 시작되는바, 동 협업체를 통해 세계화와 관련한 총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이 이루어 질 예정
- (국제계정 개발 추진: UNSD) 기존 통계자료로 세계화 등의 현상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 및 금융거래의 국제화 등의 통계 반영을 위한 심층 연구 필요
- 세계화는 생산과정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킴으로써 생산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것인바, 이로 인해 실물 및 금융부문의 중복 계상 가능성 증가
 - 상기 현안 대응을 위해 OECD, IMF 등 국제기구 및 지역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, 확장 국제계정체계 핸드북(Handbook on System of Extended International and Global Accounts) 작성도 그 일부로 이루어짐
 - 핸드북은 교역, 금융, 환경 및 사회통합 등의 여러 문제와 관련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측정 문제를 다루게 되며, 이를 통해 본 계정의 측정 체계를 제시할 것임
 - 확장 국제계정은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표를 통합한 것으로, 이를 통해 생산, 소득, 지출 및 자산 등의 국가 간 연계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
 - 또한 기존의 핵심계정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개발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 기존 계정의 정도 및 정합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 - UN은 각 지역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결성하여 본 계정의 지침 작성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, 2016년 1월에 관련 회의 개최 예정

- **(확장 공급사용표 작성: OECD)** 부가가치 기준 무역이 세계화에 따른 경제현상 변화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부상하고 있으나, 다국적기업의 생산 비중이 커지고 이들의 연계가 복잡해지면서 측정의 어려움도 증가
 - 기업특성별 무역통계(TEC) 및 다국적기업통계(FATs) 확산 보급 등 상기 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TEC, FATs, 국민계정 및 해외직접투자통계 등 관련자료 간 연계가 미약하여, 활용에 제약
 - 또한 투입산출표의 수치는 해당부문의 평균적인 기업을 대표하고 있어 기업의 수출입 비중에 따라 지표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고, 다국적기업의 경우 지식재산생산물 거래 및 가격이전 등의 반영에도 한계
 - 이러한 생산활동의 국제적 분화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각기 다른 통계를 공급사용체계에 통합한 확장 공급사용표의 작성을 추진
 - 확장 공급사용표는 기존의 공급사용표를 기업의 소유형태, 수출입 비중 및 종사자 규모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투입산출표의 특정부문 내의 동질성을 제고할 수 있음
 - 확장 공급사용표의 작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추진의 용이성 및 정책입안자에 대한 적합성 등의 고려가 필요한바,
 - 한국, 호주, 캐나다 및 중국 등 15개국의 통계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을 통해 추진의 용이성 및 이용자 적합성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방법론의 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

2. 속보성 지표

- **(속보성 지표 개선사업: UNSD)**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의성 있는 경제 지표 작성을 통한 경제상황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되었음
 - 이에 따라 국제통계기구를 중심으로 공식통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료의 시차(data gaps)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기 시작
 -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경제 및 금융통계 관련 전문가그룹(Inter Agency Group, IAG)은 금융부문의 위험요인과 관련한 자료 시차의 파악 및 국제 금융네트워크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추진하였고,

- UNSD는 Eurostat과 공동으로 속보성 지표와 관련된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
 - 2008 SNA는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측정 상의 여러 현안들을 통합하여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있는바,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는 지표들은 정보량보다 시의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따라서 지표 자체의 시의성과 함께 국제기구의 자료수집 절차의 개선도 필요한바, 이와 관련하여 UN은 2011년부터 속보성 지표 개선프로그램을 추진
 - 속보성 지표 개선프로그램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동향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한 핸드북 작성은 현재 작성이 완료되어 발간 준비 중에 있고,
 - 속보성 지표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경기종합지수 관련 핸드북 제작은 모두 2016년 1월 완료 예정임
 - 향후에는 지역위원회의 협조 하에 개별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상기 사업들의 효과를 제고할 계획
- **(OECD 선행지수: OECD)** OECD는 32개 회원국 및 주요 참여국의 기업 및 소비자조사, 단기동향지표, 금융, 무역 및 고용자료를 기초로 국제경기 선행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, 동 지수는 6~9개월의 선행성을 지니고 있음
- 동 지표를 GDP와 연관지어 살펴보면, 2008년 초 GDP가 정점이었을 때의 지표 선행성이 2009년 초 저점이었을 때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, G7 국가 모두 저점에 대한 지수의 선행기간이 짧았음
 - 또한 선행지수 작성시점에서 수행한 실시간 분석결과를 경기 전환점이 도래한 이후 사후에 수행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, 사후분석의 신뢰성이 약간 높게 나타남
 - 동 지표는 OECD의 향후 경기예측의 오류를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갈 계획
- **(속보 GDP 편제: Eurostat)** 통계이용자들의 시의성 개선 요구 증가로 국제기구에서는 동향자료 수집체계 개선 등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경제 전반의 조속한 파악을 위해서는 분기 GDP의 조기 공표가 바람직

- 현재 유럽계정 속보 추계결과는 기존 추계결과보다 30~45일 전에 발표되고 있어 시의성은 개선된 반면, 회원국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간접 추계방식을 사용함에 따라, 기존의 정도 유지에는 한계
 - 이에 따라 세부항목 추계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바, 많은 회원국들이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실질성장률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분기 성장률만을 집계
- 상기 배경 하에 유럽 GDP 속보의 공표시기 단축을 위한 T/F가 설립되어 분기 경과 30일 후에 속보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
 - 이를 위해 분기 경과 30일까지 수집 가능한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시산 작업을 수행하고 시산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있음

3. 국민계정 추계현황

- (국민계정 추계현황: 칠레) 칠레의 국민계정 및 국제수지표 작성은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(3개과 62명), 통계청은 기업, 물가, 고용, 사회 및 인구 통계 작성 등을 주관
 - 국민계정 작성은 연간, 분기 및 월간으로 작성되며, 작성범위는 비금융 부문의 대차대조표를 제외한 모든 계정을 포괄
 - 기준년 개편은 1962, 1977, 1986, 1996, 2003 및 2008년에 실시되었고, 현재 2008 SNA 이행이 진행 중
 - 연간추계는 생산, 분배, 지출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급사용표를 중심으로 계정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, 잠정 추계결과는 대상년도 종료 15개월 후에, 확정 추계결과는 27개월 후에 공표
 - 공급사용표는 111개 산업 및 176개 품목으로, 산업연관표는 111개 산업으로 작성되고 있으며, 대상년도 종료 27개월 후에 공표
 - 분기추계는 생산(26개 산업) 및 지출부문(16개 항목)만 추계하며, 연간 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벤치마크기법을 이용하고 있음
 - 1~3분기 추계결과는 분기 종료 48일 후에, 4분기 추계결과는 연간 잠정 추계결과와 함께 분기 종료 78일 후에 공표

- 지역계정은 생산부문만 작성되고 있으며, 국민계정 추계결과를 기초로 한 하향식 추계방법 적용
 - 잠정 추계결과는 대상년도 종료 8개월 후에 지역 총합만 공표하고, 15개월 후에 12개 산업별로 세분 공표
- 현재 중앙은행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2013년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인바, 개편과 함께 2008 SNA 이행, 제4차 표준산업분류 및 제2차 중앙생산물 분류 채택 등이 이루어질 예정
- (국민계정 개선 프로그램: 뉴질랜드) 뉴질랜드는 국민계정 추계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, 연간추계과정 정비, 명목 및 실질 가격 기준 공급사용표의 수치조정기법 개발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음
- 추계과정 정비는 국민계정 추계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생성된 자료가 안정적 수준(steady state)에 도달했는지 검증한 후, 다음 단계로 이행하도록 추계과정을 재설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
 - ① 외부 기초자료 → 추계에 투입할 적정지표 선별
 - ② 추계 투입 원자료 → SNA 기준에 맞도록 조정
 - ③ SNA 자료 → 주요 지표 추출 및 오류 점검
 - ④ 수치조정 전 자료 → 통합체계 안에서 항목 간 수치 조정
 - ⑤ 수치조정 자료 → 총량 집계
 - ⑥ 추계결과 자료 → 공표 준비
 - ⑦ 공표 전 자료 → 공표
 - ⑧ 공표 자료
 - 다만, 단계별 자료의 안정적 수준 점검 및 이행이 상기 순서대로 선형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은바, 예컨대 수치조정(balancing) 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
- 추계과정 정비와 함께 새로운 국민계정 연간자료 조정방법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바,
 - 명목기준의 공급사용체계 안에서만 실시되던 연간추계 수치조정 방법을 확장하여 명목 및 실질기준의 공급사용체계를 이용하여 명목 추계결과 및 실질 추계결과의 조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임

- 상기 개선안의 추진을 통해 명목 및 실질 추계결과의 정도 제고는 물론, 실질 생산 GDP와 실질 지출 GDP 간의 괴리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□ (유럽 통계교육 프로그램: Eurostat) ESTP(European Statistical Training Program)는 유럽국가의 통계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유럽지역 통계에 사용되는 개념 통일 및 법제와의 일치성을 지향

- ESTP의 국민계정 교육프로그램은 국민계정 작성과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관점들을 유럽의 작성체계 안에 통합하려는 취지 아래 관련 이론 및 실무 지식을 교육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초급, 중급 및 고급과정으로 구성
- 상기 과정과 별도로 Eurostat 주관 하에 Eurostat의 스태프 및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에 의해 국민계정 이론 및 실무교육이 병행 추진 중이며
 - ESA 2010 이행과 관련하여 연금, R&D, 가공·중계무역 관련 내용을 중점 교육
- 국민계정처럼 내용이 광범위한 경우, 과정의 내용 구성, 적절한 교육수준 설정, 이론과 실무지식의 조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바, 각국 전문가들의 경험 및 의견 공유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기대

4. 기 타

□ (인적자본 T/F 활동 보고: 노르웨이) 2013년 유럽통계인협의회(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, CES)를 통하여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위성계정 개발을 위해 T/F가 설립되어 2014년부터 활동을 개시하였음

- 그간 T/F는 인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침 작성을 추진하여왔는바, 2016년 2월 지침 초안을 CES 집행부에 제출하고, 회원들의 자문을 거쳐, 발간 승인을 위해 2016 CES 총회에 회부 예정
 - 동 지침은 인적자본 측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권고와 함께 비용접근법 및 생애소득접근법 등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수록하였고, 위성계정의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
- 인적자본 측정과 관련해서 SNA 통합계정 내의 인적자본투자 처리 및 실질화 방법 등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바, T/F를 통해 추후 보완해 나갈 예정

- (토지 및 비금융자산 T/F 활동 보고: OECD) OECD는 G-20 Data Gap Initiative를 통해 대차대조표, 자금순환표 및 제도부문별 자료 공표 확대를 권고하였고, ESA 2010도 비금융자산의 대차대조표 작성을 권고한 바 있음
 - 이에 따라 2012년 7월 유럽중앙은행(European Central Bank, ECB)의 참여 하에 Eurostat-OECD 합동 T/F가 결성되었고 이를 통해 비금융 자산 추계와 관련한 개념 설정 및 측정방법 정립 등을 위한 연구 추진
 - T/F는 발족 이후 2014년 12월까지 토지자산 추계와 관련한 연구 수행 후 토지자산 추계에 대한 개념 및 추계실무를 개관한 지침을 금년 6월 발간 하였고, 9월에는 구축물 순스톡의 국가별 추계사례집 발간
 - 현재 2016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재고자산 추계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, 한국, 미국, 캐나다 등 국가별 추계사례 및 추계 관련 주요현안을 파악하고, 이를 기초로 재고스톡 추계지침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
- (환경계정 T/F 활동 보고: OECD) OECD는 녹색성장전략의 하나로 환경계정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자연자원 관리 및 대기오염 관련 6개 지표*를 선정하여 개발 추진
 - * ① 지표 및 토지이용 변화, ② 자연자원기반의 발전, ③ 자연자원의 성장기여도, ④ 비에너지 원재료의 생산성, ⑤ CO₂ 생산성, ⑥ PM2.5 노출 인구
 - 상기 지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발굴 및 환경계정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OECD는 2013년 9월 전담 T/F를 구성하고, 환경계정 자료 작성과 관련한 국가별 자문 및 자료수집 등을 수행토록 하였음
 - T/F 활동 결과, 환경계정 작성지침에 기초한 산업별 대기배출계정 DB 및 광물·에너지 자원의 스톡 및 플로우에 대한 DB가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되었는바
 - 대기배출계정 DB는 모든 EU-OECD 회원국 자료와 함께 호주, 캐나다, 노르웨이, 스위스 및 터키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, 광물·에너지 자원 DB는 호주, 캐나다, 네덜란드 등 7개국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
 - 향후 OECD는 지표들의 정책 부합성 및 가용성을 높이는 한편, OECD가 기존에 시행해오던 자료수집 및 생산체계와의 연계를 모색할 계획
 - 환경계정은 아직 다른 국제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 않고 있는바, OECD는 향후 작성국가의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